

# “민생경제·경제도약 재정 역할 확대” 방침

### 최병관 행정부지사 “도 내년 예산 10조6919억... 전년대비 7% 증액”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내년 예산 총 규모는 10조6,919억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7% 늘어난 수준이고,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민생경제와 경제도약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여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사진)는 8일 오후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을 초청, 민생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전북구현을 위한 예산에 방점을 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최 행정부지사는 “맨 먼저 2025년 예산은 수립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 운을 때려, ‘국제 징수 환경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 세수 여건이 어려워졌으며, 경기회복 둔화와 고물가로 민생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곳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부지사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하며 그러나 도의 예산 편성 원칙은 분명했으며, 그 원칙은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저출생 TF를 통해 발굴된 저출생 대책을 각 분야별 예산을 담았다.”고 했다.

또한, “12월 27일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이 자질 없이 실행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혁신



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 부지사는 “이를 위해서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무엇보다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일에 재정을 우선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부지사는 “먼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전북의 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전북 도민 경제 부흥에 1조3,32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북의 강점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생명 산업 수도 조성에 1조 160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며, “문화·체육·관광 산업은 전북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2,535억원을 투입해 이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구심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또한, “인재 양성은 전북의 희망이자 자사이므로 전북형 통합교육 모델 구축 등 창의적

인재 양성에 3,893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하며,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와 안전에 총 4조 4,40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전북의 경제영토를 세계로 넓혔다.”며, “이제 2036 올림픽 유치로 세계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도 밝혀 주목받았다.

끝으로, “어떠한 도전과 시도, 그리고 성과도 도민의 삶과 연결돼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이번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에 기업인의 꿈과 청년의 꿈, 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가 담겨 있음을 명심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고, 전북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보겠다는 전북도정의 의지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내년 예산안이 도민 모두의 삶을 포용하고 특별한 전북을 향한 변화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브리핑과 관련 한 도민은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전북 자치도에서만 1,989억원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알뜰한 살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여실히 보인다.”며, “계회대로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실제로 전북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10일 김제에 위치한 전주김제원주축협 김제지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천만인 서명운동 전북특별자치도당 발대식이 개최됐다. 왼쪽부터 정청태 법사위원장, 이원택 민주당 도당위원장, 한준호 최고위원,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 범민주 정치연합체 구성·비상거국내각 제안

### ‘광란의 정치, 반격의 서막’ 새미래민주당 제2창당 결의대회 성료 정치적 대안으로 부상할 전략 공개... 포용적 개혁주의 노선도

새미래민주당이 10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제2창당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서 ‘광란의 정치, 반격의 서막’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윤석열·김건희·이재명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대치 정국으로 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비판하고, 새미래민주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전략을 발표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 대표로 인해 발생한 범민주 진영의 혼란과 분열을 해소하고 3총(이낙연·김세균·김부겸) 3김(김경수·김동연·김세환) 등 범민주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치연합체를 만들자”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비상거국내각’도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위시한 원내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이 아닌 ‘87 체제’ 종식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헌도 제시했다.

전 대표는 “새미래민주당은 그냥 반이재명 정당이다. 새민주를 두고 ‘반명 반명’ 하는데, 너무 얽잡아보는 표현”이라며 “우리는 반명 정당이 아니라 반 구질서, 반 양당적대정치 정당이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

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친 ‘새질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당의 전면 쇄신과 조직 강화 작업을 진행해온 새민주의 새로운 비전과 정치적 진로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반공생전·신자유주의·뉴라이트 보수를 반대하고, 적대적 전투주의 옛 진보와 결별하는 포용적 개혁주의 정당 노선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국의 당원들과 함께 이낙연 전 총리, 장호권 전 광복회 회장, 설훈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재훈 기자



### 지방소멸 · 식품사막 대응 지역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남권 의원(전주9)은 지난 8일 지방소멸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서남권 의원 대표의원인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발제자로 이성재 전북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나섰고, 전북대학교 정호진 교수, 군산대학교 이국용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이종훈 정책기획관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재 실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의 핵심 주제로 논의된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종으로 자리한 이명연 의원은 “기존 동부권 지원 조례를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남권 의원은 “식품 사막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조례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전북 자치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조선왕조실록, 역사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

#### 국주영은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지난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선왕조실록을 역사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위상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국보 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단일 역사서로, 지난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미래세대에 전수해야 할 보편적이며 소중한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주사고본을 제외하고 모두 소실된 바 있다.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 전주사고의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겨 목숨



을 걸고 보호하였으며, 이는 이후 조선왕조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병자호란이 발생했을 때, 묘향산의 실록을 적상산으로 옮기면서 전북자치도는 실록을 보존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조선왕조실록을 지닌 중심지임에도, 문화유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단발성 보여주는 행사 행사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주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조선왕조실록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위상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 “코무덤의 흙, 남원 만인의총에 모셔야”

#### 임종명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일본 코무덤의 일부 흙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순국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전해야 하는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에서 왜장의 기문이나, 세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역사 왜곡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투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왜곡된 관점에서 역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역사왜곡의 문제



점을 바로 잡고 민족의 자긍심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 교토에 있는 코무덤의 일부 흙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무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적들이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선인의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 교토 문은 비극적인 상징이다. 코무덤의 흙의 일부를 남원 만인의총으로 옮겨오는 것은 단순히 흙을 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후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이만호 기자

### “도 인사위원회, 갑질 면죄부로 전략”

#### 정중복 도의원, 경징계 결정 비판... “인사 원칙 바로세워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중복 의원(전주3)이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도 인사위원회가 A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월 A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A 전 실장은 사직 의

사를 표명했다. 이후 개인 SNS에 전복이 왜 제일 못사는 지역인지 알겠다는 등 노골적인 지역 비하 발언을 올려 공분을 샀다.

논란이 있자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두 번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7월 중징계 요구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최근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인사위는 경징계(감봉 3월)로 감정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중복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전북 지역이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가벼워 인사위원회가 갑질 면죄부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라며, “이미자도 바로 사직서

### “지역 균형발전 위해 서남권 특별회계 설치될”

#### 영역선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영역선 의원(정읍2)은 지난 8일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부터 서남권에 해당하는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소외되어 왔다”며,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동부권 특별회계 독립된 서남권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2011년부터 시·군당 50억 원씩 300억 원, 2021년부터 60억 원씩 3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왔다.

그러나 서남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타당성 있는 객관적 기준의 부재로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조출생

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에 근거하여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동부권 6개 시·군뿐만 아니라 서남권 4개 시·군 모두 이에 해당하면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영역선 의원은 “도내 균형발전에 있어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중앙부처에 재정 특례 등 재정 제도의 개선만을 요구하는 것은 도정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며, “동부권 특별회계와 독립된 서남권 특별회계 설치로 제도적·재정적 형평성은 물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신속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가 수리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전 실장의 사제가 관례가 되어 갑질이 한번 처벌받고 마는 일탈 행위로 인식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이다”라며, “갑질의 일상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조직문화가 경징계 사기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창의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지역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이라고 강조하며, “달려버린 창의성의 문을 다시 연다는 마음으로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엄정한 인사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갑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환기시켜 조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 민주 윤준병 의원, 고향 상하면서 ‘토방청담’ 개최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9일 고창군 상하면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현장 중심·지역 밀착형’ 소통의 대표 브랜드 토방청담(土坊淸談)을 개최했다.

이날 토방청담은 상하면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애로사항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윤준병 의원이 꿈꾸는 미래의 ‘상하면’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이야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구시포해수욕장 등이 포함된 상하면이 고향 서남권 해양관광의 중심지”라며, “농어촌 관광진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